

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유지·아특법 개정 추진

광주시-문체부, 제4차 정책협의회 개최

내년 국비 확보방안·국립광주국악원 건립 논의도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유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21년 국비 확보 등 현안사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안사항인 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유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사항, 2021년 국비 확보방안 등 현안사업 논의를 위한 '제4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조인철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과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박태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 김도형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아특법 개정사항 및 2021년 국비 신규·중액사업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유지와 아특법 유효기간 5년 연장 방안 처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설계역비 지원 ▲국립광주국악원 건립(유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출자 ▲2021년 국비지원 사업 등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관련해 아특법 부칙 제2조에 대한 보완조치로 아특법 시행령을 지

난 3월말 개정해 현 운영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근거는 마련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5년 연장 유지'를 내용으로 한 아특법 개정안(2020년 6월 9일 이병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이 올해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또 이날 광주시가 건의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예타 통과, 국립

국악원 광주 유치, 아특법 유효기간 5년 연장 등은 사안별로 광주시와 업무 공유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병국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현 운영체제 5년 연장 추진과 관련해 문화전당의 위상정립과 최소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앞으로 남은 조성사업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성사업의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5대

문화권사업 등 핵심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국립광주국악원 유치,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등 우리 시 핵심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29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5대 문화권 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제기관 설립 등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가운데)이 17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박태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김도형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녹색축산농장' 23호 추가 지정

전남도는 전남형 동물복지농장인 '녹색축산농장'을 올해 23호를 추가해 모두 236호를 지정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사업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기반으로 2012년부터 추진중인 역점사업이다. 기존 관행 축산과 정부 동물복지 인증제도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정은 희망농가가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이 검토한 후 전남도가 서면 및 현장심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 받은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대상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비롯 HACCP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정부 인증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중 1개 이상 인

증을 받은 농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는 전남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 등이 참여해 가축 사육밀도와 가축운동장 확보 여부, 축사 청결상태 등 22개 항목을 평가한다. 적합 판정은 합계 200점 중 1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지정된 농가에는 농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복지 축산 실천과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축산 농가들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초중고 특수학교 '남도장터 포인트' 지급

19만명에 75억 어치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 도내 22개 시·군과 협업을 지원한 2차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대상인 19만명에게 75억원 어치의 남도장터 포인트를 지급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4만원 상당의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 상품 구매 포인트를 순차적으로 지급했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남도장터에 입점한 꾸러미와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전남도가 운영중인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의 일일 방문자수는 3만9000명으로 평소 1일 평균 8000여명 대비 무려 387%가 증가했고, 일일 주문건수도 1만 6000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16일 기준 포인트로 구매한 실적은 18억원으로 총 사

업비의 23%가 사용됐다. 학생, 학부모가 선호한 상품은 친환경 농수축산물 꾸러미로 확인됐다. 특히 나무 우리돼지뽕과 순천 바비큐 한상세트, 여수 한돈 구이세트, 쌀·잡곡, 간 고등어와 굴비, 치즈·돈가스 등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구매할 제품 정보를 지역 맘카페와 네이버 실시간 채팅 등으로 서로 공유하며, 지역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 제품을 우선 선택하는 등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남도장터에서 쌀 20kg과 야채, 생선을 샀는데 택배가 아주 빠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학생 1인당 4만원 상당의 친환경 꾸러미를 23만여 학생 가정에 공급했으며, 학교급식 중단으로 집행되지 못한 3·4월분 무상 급식비로 2차 학생가정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다음달 출범 광주 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광주시, 전국 최초 '온라인 아이돌보미 교육'

4개팀 25명 직원도 채용

광주시가 7월 출범하는 광주 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를 공모한다.

17일 광주 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재단 업무와 재정을 총괄하며 임기는 2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관광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교수급으로 연구·근무한 경력이나 3년 이상이거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2년 이상인 사람이다. 관광·마이스(MICE)·경제 등 관련 기관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 한 경력도 있어도 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26일 1차 서류 심사, 이달 중 2차 면

접 심사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광주 관광재단은 지난달 발기인 총회를 열어 정관을 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원, 이사 등 13~15명으로 구성된 이사진과 경영기획, 관광마케팅, 관광진흥, 관광콘텐츠 등 4개 팀 25명 규모 직원도 채용한다.

일부는 재단에 흡수되는 광주 컨벤션뷰로 인력을 승계해 채운다. 관광재단은 광주시 출연 기관으로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구 역할을 한다. 관광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 현실을 고려해 관련 산업 발전을 이끌 사령탑 선임이 정실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코로나19 확산 예방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보수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내 아이돌보미는 900여 명으로, 이들은 매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광주시는 필수 집합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또 강의실 1곳당 50명 기준인 집합교육도 20여명으로 나눠 실시하고, 하루 두 차례 강의실과 주변을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오는 25일부터 7월30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성희롱 예방 등 기본과정 8시간과 특화과정 8시간 등 총 16시간이며, 아이돌보미들이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과목 교수의 동영상과 학습하고 인증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춤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일대일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만 3개월 이상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15~85%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나 상담대표전화(1577-2514), 5개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전남도가 최근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시설들을 중심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지난 2·4월에 실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 지속으로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전남도는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국민관심 분야와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해 취약시설인 급경사지 등 631개소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자문단과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한 후 점검 결과를 공개해 책임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결과 확인된 안전취약요인은 즉시 보수·보강 조치하고, 정밀진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게 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등 예방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맑고 깨끗한 우리 땅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서부발전의 <신재생로드맵 3025>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행복에너지 **wvp** 한국서부발전지회